

푸틴 취임식 참석하고 뒤통수 맞는 외교

태평로

이 용 수

논설위원



정부가 지난달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취임식에 현지 대사를 참석시킨다고 했을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정적을 제거한 독재자가 영구 집권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 영장을 발부하 전범(戰犯) 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보이콧 요청에 자유 진영 전체가 관히 응한 게 아니다. 한국의 돌출 행동을 두고 외교가에선 뒷말이 무성했다.

한 달 뒤 푸틴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 한·러 관계 파탄을 경고하던 어조가 많이 누그러졌다. 말뿐이긴 했지만 한국의 선의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푸틴이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푸틴 방북설은 이런 분위기 속에 본격 확산됐다.

외교가와 학계에선 ‘북·러가 소련 시절 군사동맹을 복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부활한다는 얘기였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동맹 조약의 핵심이다. 1990년 한·소 수교로 사문화됐고

1996년 조약 자체가 폐기됐다. 이것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한·러 관계가 수교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한국 대러 외교의 실패를 의미했다. 대통령실은 의아할 정도로 낙관적이었다. 군사 동맹 부활까진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러시아 측 언질을 받은 듯했다. 안보실장은 TV에 나와 “러시아 측에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러시아와 소통 중이며 결국 우리 뜻이 관철될 것이란 메시지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유사시 자동개입’ 북·러 조약 낙관론 퍼다 헛다리 짚은 龍山 최악에 대비하는 게 안보인데 러시아 기만 전술에 넘어갔다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푸틴은 회담 직후 회견에서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했다. 김정은은 “군사 동맹”을 거듭 얘기했다. 두 사람 말을 합치면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부활했다는 얘기였다. 무슨 까닭인지 대통령실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주요 언론사들에 전화를 돌려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다음 행동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못했을 것이다.

회담 이튿날 북한은 조약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제4조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였다. 명백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조항도 있었다. 우리 뒤통수를 친 정도가 아니라 등에 칼을 꽂았다는 평가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제야 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부산을 떨었다. ‘오관’으로 시작해 ‘현실 부정’을 거쳐 ‘뒷북 대응’으로 막을 내린 한 편의 촌극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조약 내용을 파악해 보고했지만 상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의 립서비스를 맹신했다는 취지였다. 전직 고위 관리의 “러시아의 기만 전술에 당한 것 같다”고 했다.

예전의 러시아가 아니다. KGB 요원 출신인 푸틴은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법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워야 한다”는 레닌의 교시를 따른다. 이런 집단을 상대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희망적 사고다. 푸틴 취임식에 참석하면 러시아가 알아줄 거란 기대, “한국에 감사하다”는 푸틴 발언에 반색하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존재할 리 없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철석같이 믿고, 가장 없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외교 자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어땠나. 안보는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다. 희망 회로 돌리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기복 신앙이다. 푸틴의 방북이 한국 안보팀의 실력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김준의 맛과 섬 [196]

별교 낙지초물회

낙지가 가장 좋아하는 달은 6월이다. 6월 전후해 지역별로 시기를 정해 자율적으로 낙지잡이를 멈춘다. 산란을 앞둔 어미 낙지를 보호해 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 시기에는 연승, 통발, 맨손 등 모든 낙지잡이가 금지된다. 또 유통업체도 불법으로 잡은 낙지를 유통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낙지를 판매할 수 있지만 금어가 이전에 포획 채취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이라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우리 바다에서 나는 낙지를 먹고 싶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갯벌이 발달해 팔낙지를 많이 잡는 전라남도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낙지를 잡을 수 없는 시기이다. 금어가 직전에 별교 갯벌에서 잡은 낙지로 만든 ‘낙지 초물회’를 만났다.

별교라면 꼬막을 떠올리겠지만 여자만(汝自灣)에 꼬막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뽕배어업으로 낙지, 가리맛조개, 짬뽕어도 잡는다. 가을에는 그물을 이용해 전어도 잡는다. 별교에는 이러한 제철 해산물을 이용한 계절 한정식을 차려내는 식당들이 있다. 별교 갯벌은 순천만 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에 등재된 갯벌이다. 별교처럼 가까운 곳에 밥상에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해산물을 내주는 건강한 갯벌을 갖춘 지역도 흔치 않다. 여자만은 여수, 순천, 보성, 고흥과 접한 내만으로 팔갯벌이 발달했다. 팔갯벌은 고운 진흙으로 이루어진 갯벌로 낙지의 발이 가늘고 길며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낙지 초물회는 여자만에서 잡은 산



낙지를 사용한다. 독특한 것은 산낙지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보통은 낙지를 살짝 데쳐 열음을 뺀 물회를 만든다. 그런데 물도 열음도 넣지 않는다. 그래서 무안이나 신안에서 먹었던 낙지물회와 다르다. 낙지탕탕이처럼 살아 있는 낙지를 다진 후 양념과 식초를 더했다. 물회처럼 먹을 수 있고 낙지탕탕이처럼 안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비벼 먹으면 식사로도 훌륭하다. 금어기가 끝난 후 별교 여행을 할 기회가 있다면 낙지 초물회를 먹어보길 권한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説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다.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당헌 때문이지 갑작스럽게 당대표를 그만둘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길지 않게 고민해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연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이 대표에게 “당대표에 나서달라”며 공개 ‘요구’ 하고 나섰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는 공천 혁명과 당원 주권 혁신을 이뤘내 총선에서 압승을 만들었다” “김대중 이후 이처럼 독재 권력의 압박을 받은 정치인은 없다”고 했다.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이 대표가 다시 돌아오셔야 한다”고 했다. 4성 장관 출신은 “이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했다. 북한, 러시아 같은 독재국가 지도자에게나 사용하는 언어로 총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 이들이 이라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팔’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최고위원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개팔이 대거 유입되면서 개팔에게 찍히면 지도부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이 대표 1인 정당인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또 대표가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해도 낮 뜨거운 아침과 아부는 혀를 차게 한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려는 것은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방탄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말도 안 되는 역지가 난무하고 있다. 일부 친이재명 성향 유튜브들은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했던 쌍방울그룹이 과거 이낙연 전 총리와 가까운 인사를 영입했는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가려 했던 것처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이낙연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말한 데 이어 예비 지도부까지 “어대명” “당대명” 하며 총성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도 내부 토론이 활발했던 민주당이 요즘은 북한 같은 행태가 나와도 침묵뿐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동영상 시청

배터리 산업은 폭발적 성장, 불 끄는 대책은 전무

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 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참사는 배터리 화재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발화 당시 배터리에서 나온 흰 연기가 공장 안을 뒤덮는 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직원이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리튬은 물과 닿으면 발열·폭발 등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나 모래 등으로 꺼야 하는데 그런 장비는 공장에 없었다. 그런 장비를 공장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배터리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화재 대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생긴 데는 금속 화재가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탓이 크다. 그렇다 보니 대응 매뉴얼은 물론 별도의 기준이 없어 소화기를 개발해도 시험할 기준조차 없다고 한다. 민간에서 개발한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가 있긴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런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도 없다. 리튬 전지는 초기에 열 폭주가 일어나 기전 가스가 나오는데 이때가 열을 내릴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

서울대병원에 이어 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녀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가 하나씩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의대 증원보다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등 진짜 의료 개혁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는 의사들의 수입인 수가가 낮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필수 의료와 낙후된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과격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월 매년 2조 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여 필수 진료과의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성이 없다. 정부가 일부 항목이라도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면 의사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현재 건강보험은 30조원 정도 준비금을 갖고 있다. 하지만 2026년

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2032년엔 62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30조원 준비금은 금방 없어진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건보료를 더 올리면 저항이 클 것이다.

일단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원래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 국고 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지켜야 한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지방교육교부금의 일정 부분도 건강보험으로 넘겨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계도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조정하는 데 나서야 한다. 필수 의료 수가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곳도 있어야 한다. 지금 각종 검사에는 5조원대를 쓰면서 정작 수술에는 4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쓰고 있다. 수술 수가가 낮은 것은 필수 의료의 사들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은 높이고 조직 검사 같은 검체 검사, MRI·CT 등 영상 검사 분야 보상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민심이면, 개나 줘라

전 국방장관(예비역 육군 중장)에게 (복도에 나가) "한 발로 두 손 들고 서 있어" 호통치는 국회

예우 커녕 모욕 ... 시정집배보다 못한 자들의 행패
요즘 학교에서도 안하고 못하는 짓거리, 태연히 자행
정청태 박지원 류가 호통치는 나라 만든 [민심]

이따위가 국회

21세기 한국인들은 오늘의 국내외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위기를 위기라고 제대로 알아본다면, 세상이 이토록 흉악할까?

국회라는 게 맨날 이재명 수사·재판한 [판·검사들 탄핵]하는데 미처있다. 특검 아니면 청문회. 청문회 아니면 특검.

15일 법사위에선, 정청래가 해병대 3성 장군과 전 국방장관에게 "10분간 퇴장하라" 했다. 박지원은 "한 발로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소리쳤다.

이따위가 국회?

[민심] 쫓다 망한 나라가 어디 한둘인가

왜 이렇게 됐나? 소위 [민심] 때문이란단. [민심]?

"윤석열 정부 + 국민의힘 + 새누리당 + 한나라당 + 박근혜 + 이명박 + 역대 모든 보수 정권들 다 싫다." 이게 [민심]이란단.

죽을 나이에 이른 꼴대 빼고, 다수 젊은 층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민심] 덕택에 이재명 조국 황운하, 돈봉투 수수 모임에 참석했다고 의심받는 민주당 의원 11명도 당당히 금배지를 달았다는 것이다.

[반(反) 보수]가 패선이란 오늘의 절난 세대

기가 막혀 두 가지를 물었다.

① 그렇다면 이재명은 그보다 낫다는 것이냐?
② 역대 보수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 치자. 그래서 저항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조 이래 [거지 수준]이던 나라가 반세

기 만에 선진국 된 건 사실 아니냐?

더 묻는다. 오늘의 풍파 없이 자란 세대, 밥 굶어봤나? 피난 가봤나? 외출복이 없어 고교 졸업 후 바깥 나가지 못한 적 있냐? 온 식구가 단칸 셋방에서 복닥거리며 산 적 있냐? 탄압도 받아본 적 없었?

설명은 이랬다. "미처 경험해 보지도 않고 [보수는 원천적으로 나쁘다]란 고정관념에 젖어 있어서"라고

갈 데까지 가보자, 동인지 된장인지

도대체 이런 고정관념이 왜 생겼을까? 편향된 ★공교육 풍토 ★현대사 교과서 ★일부 교사 ★대중문화 ★선동 정치 ★미디어 ★집단 최면 ★팬덤 현상 때문이란단.

그렇다면 대책은? 없다. 치유책은? 없다. 갈 데까지 가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대책 있다고 하는 자, 어디 한번 나와서 해봐라, 되나.

꼭, 짝어 먹고 나서야 아는 게 [민심]

김정은은 요즘 휴전선에 높은 장벽을 쌓는다고 한다. 남쪽과 ★영구분단하고 ★교류도 막고 ★왕래도 막고 ★방송·인터넷·한류(韓流)도 막겠다단. 남한 방송 물레들다가 발각 당하면, 공개처형이다. 폐쇄·공포 사회 북한에선 그런 단절 처방이 먹힐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 같은 개방사회에서는 아무리 젊은 세대에게 그러지 말라고 [늙은이 주책]을 부린다 한들, 씨알이 먹힐까? 첨단 신세대의 풍조가 그렇다는데야 그걸 누가 무슨 수로 막나? 부모가 말한다고 돼? 선배가 말한다고 돼? 정부가 말한다고 돼?

너희 마음대로 하세요!

추악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이 나라를 들어먹고 있다.

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